

대법원 2024도4021 뇌물수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2는 대학교수로
서 피고인 1의 처, 피고인 3은 부산대 의대 교수로서 양산부산대병원장 등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4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5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람으
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됨

① 피고인 1, 2는 단독 또는 공모하여, ㉠ 자녀 입시 등과 관련하여 자녀 입
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입학사정 업무,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
문서행사, ㉡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
해

② 피고인 1은 위와 관련한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③ 피고인 1, 3은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장학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뇌물
공여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¹⁾ 위반

④ 유○○에 대한 감찰 중단 관련하여, ㉠ 피고인 1, 4, 5는 공모하여 특별감
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는 직무유기, ㉡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1~4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
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4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하였음(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402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1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역임
- 피고인 2 ⇒ 대학교수, 피고인 1의 처
- 피고인 3 ⇒ 부산대 의대 교수, 양산부산대병원장 등 역임
- 피고인 4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등 역임
- 피고인 5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 역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자녀 입시 관련 범행

- 피고인 2의 아들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피고인 2의 아들이 대학교 어학교육원 주치의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서류와 봉사활동에 관한 허위서류 등을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학생 출결관리 관련 업무방해

1) 이하 ‘청탁금지법’

- 피고인 1, 2의 자녀가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는데도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대학교 온라인시험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이 다니는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에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온라인 시험문제를 나누어 푼 다음 자녀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계로써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활동 증명서, 미국 대학교 장학 증명서를 허위로 작출한 다음, 2개 대학원 지원서류에 이를 첨부하여, 위계로써 2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위조하고, 미국 대학교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출한 다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류에 이를 첨부하여, 위계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류에 위조해두었던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로 작출해두었던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공문서, 허위작성공문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

(2) 피고인 1, 3의 장학금 관련 범행

▣ 피고인 1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1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녀의 지도교수이자 양산부산대병원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3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 3의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1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어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선출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함

(3) 피고인 1, 2의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범행

▣ 피고인 1, 2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 피고인 1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음

▣ 피고인 1, 2의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할 당시, 거액의 투자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신고에 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함

(4) 피고인 1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범행

▣ 피고인 1의 증거위조교사

- 거액의 투자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자 허위 해명을 위해서 관련 회사 임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위조를 교사함

■ 피고인 1의 증거은닉교사

- 거액의 투자내역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2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겨놓으라고 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함

(5) 피고인 1, 4, 5의 유○○ 감찰중단 관련 범행

■ 피고인 1, 4, 5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여 그 비위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정치권의 구명 운동 및 피고인 4의 감찰 중단 요구 등에 따라 피고인 5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 5는 이를 수용하여 감찰반장 등에게 이러한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특별감찰반 관계자로 하여금 감찰활동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피고인 1, 4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유○○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하게 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추가감찰 및 징계 절차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민정수석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인사검증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

■ 피고인 1, 4, 5의 직무유기

- 피고인 1, 4, 5는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피고인 1, 4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비위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확인하면 수사의뢰 또는 이첩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포기한 채 해당 직무를 유기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피고인 1~4 일부 유죄, 피고인 5 전부 무죄

▣ 피고인 1

- 업무방해,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유죄[징역 2년, 추징 600만 원]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징역 1년]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3

-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4

-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징역 10월]
- 나머지 부분 무죄

▣ 피고인 5

- 전부 무죄

나. 원심 ➡ 제1심과 유·무죄 판단 동일

▣ 피고인 1, 4, 5

- 항소기각

▣ 피고인 2

- 유죄 부분 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 피고인 3

- 파기[벌금 1,000만 원]
- 뇌물공여 부분 무죄

다. 제1심과 원심 판단 요약표

피고인/죄명	공소사실	원심(=1심)		
피고인 2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고등학교 2학년 생기부 허위 기재	유죄		
피고인 2 업무방해	고등학교 3학년 생기부 허위 기재	유죄		
피고인 1, 2 업무방해	학생 출결관리	유죄		
피고인 1, 2 업무방해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유죄		
피고인 1, 2 업무방해	대학원 부정지원	유죄		
피고인 1, 2 사문서위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법전원 부정지원	피고인 1	사문서위조·행사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피고인 2		유죄
피고인 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의전원 부정지원	유죄		
피고인 1, 3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의전원 장학금	뇌물수수·공여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피고인 1, 2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식 백지신탁 또는 처분임무 불이행	무죄		
피고인 1, 2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재산신고	피고인 1	무죄	
		피고인 2	유죄	

피고인/죄명	공소사실	원심(=1심)		
피고인 1 증거위조교사	허위 보고서 작성 등 교사	<div>무죄</div> <이 부분은 검사 미항소로 제1심에서 분리·확정>		
피고인 1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교사	<div>무죄</div>		
피고인 1, 4,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위)	특별감찰반 관계자 상대	피고인 1, 4	권리행사방해	<div>유죄</div>
			의무 없는 일 강요	<div>무죄</div>
		피고인 5	<div>무죄</div>	
피고인 1,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위)	금융위원회 관계자 상대	<div>무죄</div>		
피고인 1, 4, 5 직무유기(예비)	직무유기	<div>무죄</div>		

라. 원심의 주요 판단 요지

■ 유죄 부분

- 피고인 2의 아들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당시 해당 인문학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2의 아들이 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2가 사용하던 PC에 수료증 위조와 관련된 그림파일이 저장되어 있어, 수료증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봉사활동 서류를 작출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학생 출결관리 관련 업무방해
 - 피고인 1, 2의 아들이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 2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출석처리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미국 대학교 온라인시험 관련 업무방해
 - 해당 시험에 타인과의 협력 등이 금지되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후 성적조정 등이 있었더라도 성적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
 - 인턴십 활동 증명서 등이 허위서류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1의 공모가담도 인정됨
- 피고인 1, 2의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1, 2의 아들이 사용하던 PC에 인턴십 활동 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그림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장학증명서 등이 허위인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 1의 고의, 공모가담도 인정됨
-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 지원서류에 첨부된 인턴십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의 고의, 공모가담도 인정됨
- 피고인 1, 3의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3이 장학금 규정, 선발지침 등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에게 장학금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2의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인 간 채권이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기존의 재산신고가 거짓임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성립함
- 피고인 1, 4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특별감찰 과정에서 비위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나 추가적인 감찰 또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였는데도,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감찰중단을 지시함으로써, 특별감찰반의 감찰 착수, 진행, 종결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방

해함

■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 피고인 1의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2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 1이 이를 공모하였거나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해당 문서 명의자에게 부탁하여 허위 서류를 작출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 1, 3의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뇌물공여
 - 피고인 1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3을 부산대병원장 후보자로서 인사검증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3이 병원장으로 있던 양산 부산대병원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3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개시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1, 2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에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게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
- 피고인 1의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 및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허위로 사인 간 채권을 신고하고 허위로 작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의 증거은닉교사
 -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증거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더라도 김○○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의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김○○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 피고인 1, 4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 4에 대하여 특별감찰반의 감찰 착수, 진행, 종결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특별감찰반원들로 하여금 감찰활동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음
- 피고인 5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5는 피고인 1, 4가 감찰중단을 결정한 이후 그에 관한 통지를 받았고, 당시에 피고인 5는 감찰계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 5가 피고인 1, 4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피고인 1, 4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 4가 금융위원장 등에게 유○○의 구체적 비위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고, 감찰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유○○에 대하여 징계나 감찰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평가되지 않고, 금융위원장 등이 당시 유○○에 대한 징계나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던 이상 그에 관한 구체화된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인 1, 4, 5의 직무유기
 - 피고인 1, 4, 5의 후속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아 직무집행의 필요성·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었더라도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일부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

해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 공소권남용, 석명권 행사,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누락, 양형부당 등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²⁾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2)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별로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으나, 보도자료에서는 일괄하여 간략 기재함